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자발적 휴지기 참여 농가 보상 현실화 필요
HPAI 차단 방역 위해 협조하면 오히려 손해



한국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

휴지기 보상금, 사육대비 60%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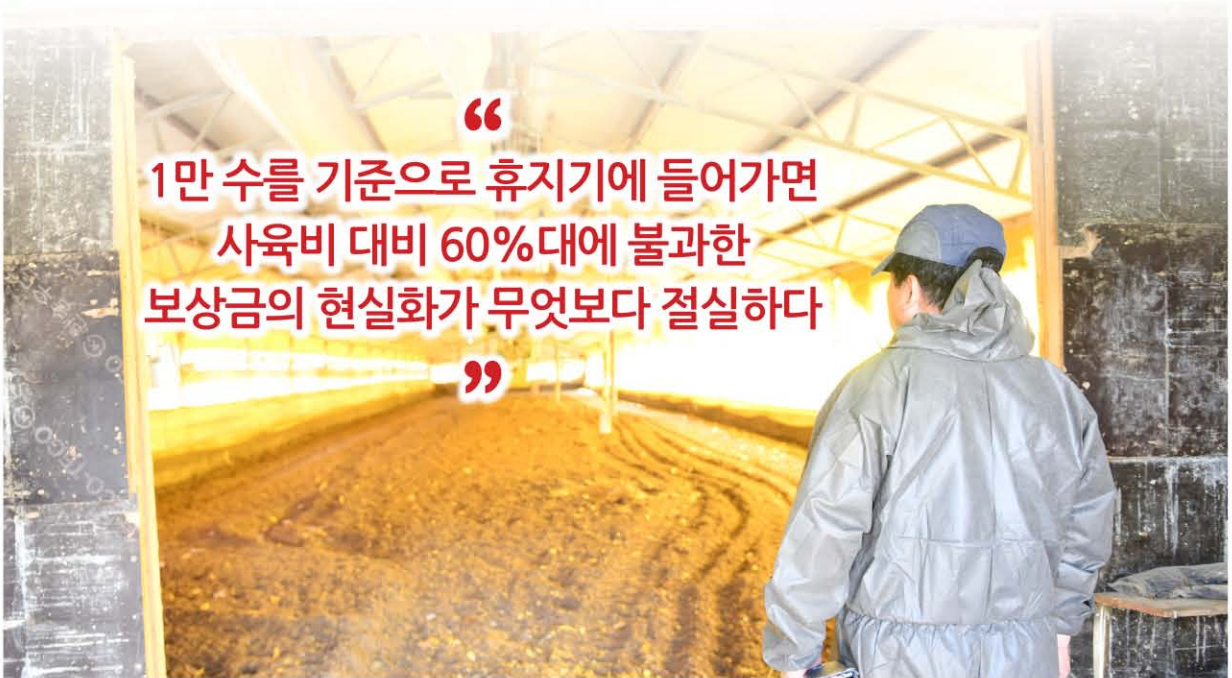
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은 경기도 안성에서 육용 오리농장을 운영하며 휴지기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해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이번 HPAI 발생 이전에 휴지기에 들어가 HPAI 피해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전국에 걸쳐 발생한 HPAI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휴지기보다 더 길게 오리를 사육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휴지기를 갖고 2월 중에는 입식하려고 했지만 HPAI 발생으로 인해 언제 입식할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한 것이다.

김 지회장은 “육용 오리 1만 수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입식해 출하할 경우 연간 8천만 원 가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휴지기에 참여할 경우 소득은 60%에 불과한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것이 현재 휴지기 보상금의 현실”이라며 “2만수 규모의 농장이라고 하면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소득이 감소해 농가들은 농장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1만 수를 기준으로 휴지기에 들어가면
 사육비 대비 60%대에 불과한
 보상금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

보상금 현실화 반드시 이뤄져야

김 지회장은 “HPAI 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지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보상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회장은 오리 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 지회장은 “타 축종에 비해 오리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지 않아 최신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리 농가들의 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HPAI 등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리 농가들의 더욱 어려워지고 시설 투자에 대한 여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오리 농가들이 비닐하우스형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 김 지회장의 지적이다.

오리사육여건 갈수록 악화

김 지회장은 연암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했다. 오리뿐만 아니라 낙농, 양돈 등 다양한 축종에서도 경험이 있다는 김 지회장은 “국내 최고의 낙농 목장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지역축협 수경사도 경험했다. 대형양돈 단지에 참여해 돼지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대형마트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런 김 지회장이 오리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

리사냥’이라는 오리음식점 브랜드에서 근무하게 되면 서부터였다. 이때 오리에 관심을 두게 된 김 지회장은 오리 사육장을 인수하게 됐다. 결국, 김 지회장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오리 사육이었다.

김 지회장은 “오리를 키우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농장 규모를 확대해 왔지만 HPAI가 지속해 발생하면서 갈수록 오리농장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오리를 키울 때만 해도 1만수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연간 사육횟수 감소, 휴지기제 도입, HPAI에 따른 이동제한 등 오리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2만 수, 3만 수를 키워야만 똑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건 악화로 인해 주변의 많은 오리 농가들이 오리 사육을 포기하고 육계로 전업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특단의 HPAI 대책 강구돼야

김 지회장은 “오리 산업은 다양한 국민 먹거리 제공 차원에서 한우, 한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리 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대가 바뀌며 생기는 각종 규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소득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